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27
----------	------

발의연월일 : 2020. 10. 23.

발 의 자 : 하태경 · 金炳旭 · 조해진
최춘식 · 신원식 · 정운천
조태용 · 윤주경 · 한기호
김승수 · 서정숙 · 주호영
이철규 · 권성동 · 구자근
김용판 · 김 용 · 김성원
이 용 · 엄태영 · 유상범
이주환 · 추경호 · 최승재
이종배 · 송석준 · 최형두
권명호 · 전주혜 · 정희용
의원(3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

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정보원의 운영 원칙) ① 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무)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 보안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

3.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4. 제1호의 직무와 연관하여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5.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6.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수사

7. 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획·조정인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정보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원) ① 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정보감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③ 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① 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조직, 소재지, 정원은 국정원 편제표에 명기된 조직에 국한하며, 정보출처와 정보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하는 경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 외에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의 보좌직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원의 조직 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원장 임명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③ 원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겸직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6. 특정 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8.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자(국회 정보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보와 신분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

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원 직원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③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정보감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

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회계) ① 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정보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정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예산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출을 승인하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⑧ 원장은 정보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전심사와 정보위원회 또는 정보감찰관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정보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 기관의 장이나 공공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사법경찰권) 정보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4조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를 준용한다.

제24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제4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 누설의 죄)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보감찰관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